

광주 문화중심도시 3차 토론회

“7곳 인위적 분산, 개발효과 못낸다”

〈7대 문화지구 조성〉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를 7대 문화지구로 특화시켜 육성하려는 문화중심도시 도시환경 조성방안이 분산형 개발로 인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도심활성화에 대한 효과까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광주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 문화중심도시 법정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제3차 ‘광주의 도시 재구성 전략에 대한 검토 토론회’에서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명확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의 7대 문화지구 사업은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몇 도청 주변 ‘핵심문화지구’의 개발 효과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문화전당과 주변 지역의 연계 효과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자들은 7대 문화지구 조성방안과 관련 ▲사업 성격과 목표의 불명확성 ▲광주의 역사성과 인권 도시로서의 상징성 부족 ▲전남과의 연계 발전방향 미비 ▲도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광주시 재원분담(지방비) 원칙에 따른 사업 가능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7대 문화지구 조성방안의 불명확성 = 광주를 7대 지구로 나눈 기준과 각 문화지구별 성격의 모호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현재까지 진행된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문화전당이라는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해 광주의 도시발전에 엔진을 다는 것이 목표인지,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실행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득엽 전남대 교수도 “7개 지구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전남과의 연계 방안 부재 = 영산강권

사업성격 불명확, 도심활성화에도 역행 J프로젝트등 전남과 연계 방안도 필요

개발 계획과 J프로젝트 등 전남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오병태 호남대 교수는 “문광부는 광주 문화환경조성을 문화중심도시사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화수도가 20년 장기계획인 만큼 20년후 도시 인구축이 영산강 유역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 서해안 시대 및 영산강 벨트 연결을 고려한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7대 문화지구 중 영산강·황룡강 일대의 ‘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지구’ 조성시 전남도의 영산강권 개발 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와 광주시간 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 분담 논란 = 문광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 체계를 국가(국가 사업, 국고 원칙)와 광주시(지역 사업, 시비 원칙)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에 1조4천억원의 예산을 부담하는 대신 광주시는 도시기반 조성(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1조원(민자 5천억원 포함)을 부담하

리는 재원분담 방침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에서 1조원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7대 문화지구란 = 문광부가 광주시를 지역 특성에 따라 구분해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핵심문화지구(아시아문화전당 주변)와 아시아문화(사직공원, 양림동 일대)·아시아전승문화(남구 대촌 일대)·교육문화(마복동 탄약고 부지)·시각미디어(북구 중외공원 일대)·아시아산과학(광산동 비아동)·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지구(무등산·광주호, 영산강·황룡강 일대) 등이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제3차 ‘광주의 도시 재구성 전략에 대한 검토’ 토론회가 4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도의회도 ‘유급보좌관제’ 도입?

행자부 반대 불구 ‘인턴 보좌관’ 예산 반영

2억6천여만원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당초 집행부와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인턴보좌관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행정자치부 지원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인턴보좌관제가 지자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국의 다른 광역의회들도 인턴보좌관

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과 대구는 이미 관련 예산을 반영했으며, 충남과 충북, 전북, 경남도의회도 수정 예산 형식을 빌려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유급제가 실시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보좌관제를 도입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도 관계자들은 실사 인턴보좌관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집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등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에서도 인턴보좌관제 도입 요구가 높아질 공산도 크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이영은 기획행정위원장은 “시민단체 등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고 있으나 근본원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의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관련 분야에서 20~30년 썩 일해온 행정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턴보좌관제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1대회’ 추진 문제 뜨거운 논란

유지사 MBH 부도때?→전남도 “보증선 것 없다”
MBH 설계·시공 특혜?→민자사업, 시공권 당연
사업 실패때 도민 부담?→전남도 “부담액 360억 불가”

서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J프로젝트) 선도시사업으로 2010년 첫 개최를 준비중인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F1유지업체 부실화 경우 책임 문제 ▲경주장 건설 참여보장을 위한 대가성 여부 ▲사업 실패시 재정책임 등으로 나뉜다.

먼저 F1을 유치한 자본금 35억원 규모의 ‘MBH’라는 회사가 현재 자본잠식상태로 추정되지만 전남도가 이 회사와 비공개 협약을 통해 F1대회에 대한 모든 보증을 지켰다고 계약해 이 업체가 잘못되면 도민들이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MBH는 F1유치 프로모터회사로서 대회 개최권을 따 지난 10월 2일 유치조인식까지 마쳤다. 또 도가 비공개 협약을 통해 F1에 대해 모든 보증을 지켰다는 협약을 맺은 바 없다. F1 경주장은 대회운영법인인 ‘KAVO’가 국내의 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관련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도가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서 MBH가 설계·시공권을 독점하고 수천억원의 공사비 대출을 전남도가 앞선해 MBH가 부도나면 전남도가 이 회사를 떠안게 돼 도민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전남도는 “도가 개최권료 일부를 부담하고 MBH가 경주장 건설 및 대회운영 등을 책임져 양자간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경주장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므로 민간사업자가 설계·시공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 KAVO가 투자유치를 통해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토록 의무화했고, 여의치 않을 때 비로

소 도가 MBH소유 KAVO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해명했다. MBH가 지역 건설사들에게 경주장 건설 참여를 보장하는 대가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역 3개 건설업체가 KAVO의 대주주인 MBH의 신주발행에 참여해 주식을 매입하고 시공권을 우선 보장받은 것은 전략적 투자이지 이면계약이나 시공권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 F1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총사업비 6천여억원을 전남도민이 안게돼 196만명의 도민들이 가구당 135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전남도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가 6천600억원으로 추정되나, 진입도로 건설비를 제외하면 개최권료 신용장 개설이 완료된 2010년까지 전남도의 실제 부담액은 36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바꿨다.

F1을 둘러싼 공방은 사안별로 서로의 입장과 해석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차’(競車)조항 삭제 등으로 수익성 문제가 불거져 초반부터 삐걱대는 F1대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지적이 명쾌하게 해명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편 전남도가 2010년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 중인 특별법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4일 ‘F1 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상정하기로 여야 각 당 대표발의 의원과 의견을 모으고,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등 33억원 삭감

시의회 예결특위 광주시 내년 예산 확정 본회의 넘겨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조3천277억원 중 33억여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리는 등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상임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없었던 인턴보좌관제 실시 예산과 소방차량 대체 구입 예산이 예산결산특위 심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삭감 내용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영비와 각종 이벤트성 행사 비용이다. 도시철도공사 운영비의 경우, 광주도시철도

공사 측이 올 230억원이던 공기업 경감전출금을 내년에는 70억원 늘려 300억원으로 책정하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라고 이상동 의원 등이 강력 반발,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23억5천만원 깎였으나 예결위 과정에서 10억원이 되살아나 전체적으로 13억5천만원만 삭감됐다.

이 외에도 예산 삭감 내용은 ▲광주국제식품산업단지 국제불꽃박람회 지원비 및 공무원해외출장비 각 5천만원 ▲도시계획관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천500만원 ▲빛고을사랑운동 공모비 3천만원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최수호 김동원